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4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 
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6.

복지문화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6.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5 명
- 발의일자: 2024. 5. 30.(목)
- 회부일자: 2024. 5. 30.(목)
- 검토기간: 2024. 5. 30.(목) ~ 6. 5.(수)

### 2. 제정이유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)
- 나.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일상적인 안전보장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중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고,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조제4항에서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 다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
-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현재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,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, 동구, 수성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고
- 지원대상 선정과 중복지원 금지의 취지를 살펴보면 현행 법령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의 당위성이 있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사회보장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<생략>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4조(급여의 기준 등) ①-③<생략>

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<생략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-차. <생략>

3.-7. <생략>